

# 保 健 福 祉 部



# 保 健 福 祉 部

## 1. 總 括

지시사항 건수		완 료	관리종결	추진 중		미 착 수	비 고
				정 상	부 진		
총 계	42	24	-	18	-	-	-
단독주관사항	20	11	-	9	-	-	-
공동지시사항	22	13	-	9	-	-	-

## 2. 指示事項 目錄

### ○ 完了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완료연월일
20	05-43-01	종교계의 복지참여 활성화	1998.12.31
124	05-43-04	한시생활보호사업 적극 추진	1998.11.30
125	05-43-05	의료보험 통합시 보험료의 공평한 부과 방안 마련	2000.11.30
126	05-43-06	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 적극 추진	1999. 5.10
182	05-43-08	노인복지담당부서 격상 방안 검토	2000.12.30
188	05-43-09	국민연금실시에 대한 홍보강화	2000.11.30
190	05-43-10	국민연금실시에 철저한 보완과 차질없는 시행	2000.11.30
262	05-43-11	수해로 인한 보상 기준의 일괄성 유지	1999. 9. 7
301	05-43-12	설 연휴 소외 계층 위문	2000. 2. 5
306	05-43-13	복지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	2000.11.30
421	05-43-18	故 이수현군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강구	2001. 2.28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완료연월일
10	03-70-01	실업세부대책 수립	2000.12.30
48	08-70-03	경제정책 대외 홍보 강화	2000.12.30
137	03-70-08	각부처의 경비절감 노력 강화	2001. 2. 2
138	08-70-09	수해관련 대통령 지시사항	1998. 9.30
164	07-70-15	컴퓨터 2000 문제 관련	2000. 3. 4
175	08-70-16	공정한 인사행정	1999.12.22
183	09-70-17	설 연휴 대책	1999. 3.16
276	08-70-27	8.15 경축사 후속 대책의 철저한 실천	2000.12.30
304	03-70-32	각 부처의 개혁방안 보고	2000. 4.24
332	08-70-34	공정한 선거관리	2000. 4.13
366	09-70-39	금년도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의 철저한 실천	2000.11.30
382	08-70-41	추석연휴와 소외계층 위로	2000. 9.12
410	08-70-50	설 종합대책 마련	2001. 1.27

▲ '98 - '00년 완료사항은 「1998년 - 2000년도 대통령지시사항 추진상황」 책자 참조요망

○ 管理終結事項 : 해당사항 없음

○ 推進中인 事項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비 고
21	05-43-02	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철저	”
22	05-43-03	병원의 의약품 구입 비리 근절	”
181	05-43-07	노인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	”
345	05-43-14	노인 복지대책 강화	”
370	05-43-16	의약분업의 차질없는 추진	”
429	05-43-21	금연대책 적극추진	”
430	05-43-22	양성자 가속치료기 설치	”
536	05-43-23	콜레라 등 후진국병 방지대책 추진	”
542	05-43-24	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점검	”

일련번호	코드번호	지 시 제 목	비 고
157	09-70-12	방일 후속 조치 철저	정상
264	08-70-25	빈틈없는 수해 대책의 추진	"
282	08-70-29	대국민 과제 홍보	"
298	03-70-31	중산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주력	"
387	03-70-48	공공부문 노사분규에 철저 대비	"
422	05-70-51	인사청탁 근절	"
521	05-70-57	여성의 직장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	"
525	06-70-58	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 철저	"
531	07-70-58	전자정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	"

### 3. 完了指示事項

#### 1) 故 이수현군에 對한 政府 支援 方案 講究 : 421(05-43-18)

##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30일, 제5회 국무회의시)

- 이국땅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이수현군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, 훈장을 추서 하는 방안 강구

##### 나. 措置內容

- 훈장 등 영전수여
  - 전수일시 및 장소
    - 2001. 1. 30(16:30) 김해공항 노제 거행시
    - 훈장종류 : 국민훈장 석류장
    - 전수자 : 사회복지정책실장
- 의사자 심사결정 및 보상금 지급
  -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의사자 결정(2001. 2. 2)
  - 보상금 지급 : 128,400천원
  - 훈장증 송부 : 2001. 2. 28

##### 다. 事業成果

- 故 이수현군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차원의 예우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 및 의사상자제도에 대한 전 국민적인 홍보 효과를 거둠

## 共通 1) 各 部處의 經費節減努力 強化 : 137(03-70-08)

### 가. 指示內容(1998년 8월 11일, 제35회 국무회의시)

- 각 부처는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절감노력을 강화할 것
  - 부처업무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
- 경비절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

### 나. 措置內容

-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시행계획 수립·시달(2000. 2. 17)
- 2000년도 예산절약 실적 보고(2001. 1. 29) → 예산절약성과금심의위원회
  - 행정경비 : 관서운영비 등 445백만원 절약
  - 사업비 :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 개보수공사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묘지관리 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146백만원 예산절감. 다만, 사업비 예산절약사업이 당해연도 비예산사업인관계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### 다. 事業成果

- 경상경비의 경우 자율 절감계획을 통해 기관운영상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
- 사업비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내지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 실적은 없으나, 예산절약 분위기 확산에 기여

## 共通 2) 설 綜合對策 마련 : 410(08-70-50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9일, 제2회 국무회의시)

- 설 연휴를 맞아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 바람

### 나. 措置內容

- 각부처 및 산하단체, 주요경제단체 등에 따뜻한 설 보내기 운동 참여요청
  -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이상 공직자는 전국사회복지시설 위문 실시
  -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주위의 불우이웃 방문토록 권장

### 다. 事業成果
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 등이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 위문
-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불우이웃(무의탁 노인, 저소득 가정, 실직 노숙자)을 대상으로 공동 차례, 사랑의 떡국 차려드리기, 설상 차리기 등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의 외로움을 덜어줌

#### 4. 推進中인 指示事項

##### 1) 食品醫藥品安全管理 徹底 : 21(05-43-02)

가. 指示內容(1998년 4월 10일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)

- 식품과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함
- 이에 대한 위반은 반공익사범으로 처리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

##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식품·의약품 규격·기준의 합리적 개선
  - 전통식품 및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한 식품원료 확대 인정
    - 두부류 제조시 대두분 및 일정기준의 해수사용 인정
  -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선
    - 깻잎 등 40종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 54종 설정 및 24종 농약시험법 제정
  - 식품첨가물 지정 및 기준 개정
    - 에리스리톨 등 10품목 지정 및 활성탄 등 89품목 성분규격, 사용기준, 정의 개정
  - 축산물중 항생물질 기준·규격 마련
    - 스펙트노마이신 등 항생물질 34종(신규 27종)
- 국민다소비식품과 유통의약품 안전관리 강화
  - 식품위해사범 등에 대한 벌칙강화를 위한 「식품위생법」 개정 추진
    - 식품위해사범 등에 대한 벌칙 강화 : 3천만원 이하 벌금→1억원 이하
  -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「중앙기동단속반」을 상설 감시기구로 전환
    - 정원 11명(서기관 1, 6급이하 10)
  -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의약품 수거·검사 강화
    - 식품 수거·검사 78,166건, 유통의약품 2,335건
- 식품·의약품 등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
  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지정을 53 → 63개업소로 확대
  - 수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을 29 → 35개 기관으로 확대
  - 우수약품등록제도(DMF) 도입 추진
- 선진국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
  - OECD수준의 우수실험실 운영 기준(GLP) 구축
    - 일반독성 및 발암독성분야 전산화 보완
    - 유전독성분야 시험 진행중
  - 실험동물자원센터(ICLA) 구축
    - 국제실험동물인증협의회(AAALAC) 인증
  - 비임상시험관리기준(GLP)에 적합한 생물학적제제 실험동 신축중

**다. 向後 推進計劃**

- 선진국 수준의 식품·의약품 규격·기준으로 지속적 개선
-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지방식약청에 「식품전담조사반」 신설 추진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및 수입식품 국외공인검사기관 확대
- 국민다소비식품(75,000건) 및 유통의약품(2,300건) 수거·검사 강화
- 가칭 「공정서편찬협회」 및 「실험동물관리법」 제정 추진

## 2) 病院의 醫藥品 購入 非理 根絶 : 22(05-43-03)

### 가. 指示內容(1998년 4월 10일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)

- 病院의 醫藥品 구입비리 근絶
  - 病院에서 藥품을 구입할 時 비리가 많아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런 비리를 근絶할 것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醫藥品 유통개혁 基本계획 수립 보고(1998. 9. 19) 및 세부계획 확정(1999. 8. 13)
- 醫藥品유통정보시스템 구축
  - 藥사법 시행규칙 개정(1999. 10. 1) : 醫藥品포장에 바코드 부여 의무화
  - 醫藥品유통정보시스템 구축(2000. 4 ~ 2001. 5)
  - 주문거래시스템 운영 개시(2001. 7. 1)
  - 醫藥品 유통정보시스템 관리법인 설립추진준비위원회 가동(2001. 4. ~)
  - 물류조합구성운영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정, 2001. 3. 27)
  - 醫藥品물류협동조합 법인설립 인가(2001. 7. 5)
- 의료보험 藥품대금 지불절차 개선
  - 國民건강보험법에 의료보험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1999. 1. 6)
    -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정(부령) 제정(2001. 7)
- 의료보험약가등 제도 개선
  - 의료보험의藥품을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(1999. 11. 15)
  - 의료보험의藥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 지속적 실시
  - 보험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원가 미달인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적정수준으로 현실화(1999. 11 ~ 2000. 9)
- 부조리 척결 적극 노력
  - 醫藥品거래질서 자율정화위원회 운영 : 1998. 9 ~ 1999. 8
  - 관련단체의 자율정화 지속 추진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醫藥品 유통정보시스템 확산 및 이용활성화
- 실거래가상환제 사후관리 지속 실시
- 중앙 및 지역물류센터 설치(2003. 하반기)
- 의·藥업계의 자율정화운동등 지속 추진

### 3) 老人團體에 대한 支援方案 講究 : 181(05-43-07)

가. 指示內容(1999년 1월 27일, 노인의해 사업계획 보고대회)

- 노인단체들이 공동입주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중앙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연구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총사업비 66억원중 2002년도에 15억 확보
  - 철거 및 기초토목공사비 : 12억
  - 설계비 : 3억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나머지 사업비 51억원은 연차 계획에 의하여 추가확보 계획

#### 4) 老人 福祉對策 強化 : 345(05-43-14)

##### 가. 指示內容(2000년 4월 24일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)

- 늙어서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며, 노인의 행복이 국민전체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임
- 노인의료제도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,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보건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.
- 건강한 노인에게는 직장을 주거나 일감을 알선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.
  - ▲ 추가지시(2001년 5월 8일, 제18회 국무회의시)
    - 노년층의 경제적,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대책 강구(8.15 경축사 후속조치)
    - 자식이 직접하는 사적인 효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행하는 사회적 효 또는 공적인 효가 병행되어야 함

##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대
  -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
    - 요양시설 신축 : 6개소
    - 전문요양시설 신축 : 12개소
    - 치매전문병원 3개소 신축(2003년까지 18개소 운영 예정)
  - 노인본인부담금 감면대상 확대(70세이상 → 65세이상)
-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시
  -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활동 지원
  - 노인공동작업장 지원(2001년 35개소)
  -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지원 : 70개소
-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
  - 경로연금 확대(715천명 → 800천명, 199,867백만원 → 246,000백만원)
  -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: 월 84만명(673개소)
  - 치매요양시설 확충 : 41개소
- 노인복지정책 추진
  - 총리실에 민관합동 「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」 구성·운영중

##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노인의료복지시설확대사업은 예산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
-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대 운영(5개소→20개소)
- 「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」에서 노인종합대책 수립(2002. 상반기중)

### 5) 醫藥分業의 差跌없는 推進 : 370(05-43-16)

가. 指示內容(2000년 6월 27일, 제27회 국무회의시)

- 의약분업 예정대로 시행
-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되는 것임
- 이해집단 설득을 통해 추진
- 약사법개정도 이해집단과의 대화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대국민 홍보·교육
  - 공무원, 시민 등 200만명 교육
  - T.V 200회, 라디오 610회
  - 리플렛 등 900만부 제작 배포
-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(2000. 8월)
  - 의·약계로 의·약·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대한 합의안 마련(2000.11월)
  - 합의안이 반영된 약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상정(2000.12월) 및 공포 시행(2001.8)
- 의약분업 성과 점검 및 문제점 보완을 위한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(2000. 8월)
  - 1개 운영위원회 및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
  - 의약분업평가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「의약분업평가단」 주관의 “의약분업 평가 정책 토론회” 개최(2001.7.2)
- 국민불편 해소대책 적극 추진
  -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('01.8.14약사법 개정으로 '01.11.15부터 시행)
  -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('01.12.)
    - 전문 14개 성분, 102품목을 일반으로 전환, 일반 7개 성분, 41품목을 전문으로 전환
  - 장기투약환자의 편의를 위해 종래 60일로 한정하던 처방일수 제한 폐지('01.7)
  - 공휴일에 약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 활성화('01.7)
-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
  -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(2000.10월~2001.1월, 2001.5월~12월)
    -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80개 특별감시팀 구성 운영
    - ※ 담합행위·변경조제 등 1,958건의 불법행위 적발
  - 담합행위에 대한 관련법령 보완(2001.12)
    - 담합행위 유형 구체화, 우선 감시 근거 마련, 포상금 제도 실시 등

※ 시행성과

- 의약분업의 실시로 후진적인 의약품 이용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
  - 「진료와 처방은 의사가,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」 각각 전문영역을 담당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
- 2001년 5월 「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정착 종합대책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의약분업의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
  - 국민불편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제도 적응단계 진입
    - 처방전 소지 환자가 첫 번째 방문 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 증가
    - 6%('00.8월) → 97.3%('01.11월)
  -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·주사제 등의 사용량 크게 감소
    -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·주사제 품목수가 분업전에 비해 각각 23.3%, 31.2% 감소
    - 항생제·주사제를 원외처방 받은 환자수도 2001.3/4분기에는 2001.2/4분기에 비해 각각 12.81%, 47.25% 감소
    -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도 분업전에 비해 10.53% 감소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운영내용을 지속 평가하여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 실시
- 담합, 임의조제 등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
- 약품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재정 안정 도모

## 6) 禁煙對策 積極 推進 : 429(05-43-21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31일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)

- 담배는 암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흡연하는 등 피해가 많음
  -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금연방안을 마련하고, 정부가 솔선하여 금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금연종합대책 수립
  - 1차 관계부처 협의(2001.3.6), 국무총리 보고(3.14), 대통령 보고(4.3), 금연대책 토론회(4.26), 제2차 관계부처 협의(8.3), 금연종합대책 확정(11.20)
  - 중앙정부청사, 보육시설, 유치원, 초·중·고교 교실, 의료기관 등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
  - 금연구역 확대, 금연구역내 흡연단속 강화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차단,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강화, 금연실천지원 등 금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
- 금연교육 및 홍보
  - 금연공익광고 실시
    - TV광고 3편(2001. 5월 ~ 11월), 라디오광고 3편(2001. 5월 ~ 12월)
  - 청소년에게 담배판매행위 등 법 운영실태 점검(2001. 9월 ~ 10월)
  - 청소년건강캠프 개최(대상 : 중학생 785명)
  - TV·영화 등에서 흡연장면 방영자제 협조서한 발송(방송작가 등 556명)
  -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실시(전국 중학교 120개교)
  - 2002 월드컵을 금연월드컵으로 추진(관람석은 금연구역으로 운영)
  - 금연지도자교육 실시(5회 327명)
  - 흡연자 건강검진 실시(40대 이상 흡연자 5,496명)
  - 직장인, 지역주민 및 군장병 대상 금연교육 실시(26,166명)
  - 범국민금연운동본부 설치·운영으로 체계적인 금연사업 추진기반 마련(2001. 12. 10)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금연구역확대 등 법적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(2002년 상반기)
  - 중앙청사,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원칙적으로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
  - 일정규모 이상 대중음식점 등은 금연·흡연구역으로 구분 운영
  -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점검 강화
  - 금연사업확대
    - TV·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통한 금연홍보 강화
    - TV 드라마 등의 흡연장면방송 자제 협조 요청
    - 2002 한일월드컵을 금연월드컵으로 개최 추진
    - 금연교육강화
- 금연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
  - 금연사업 확대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의 상향조정 추진

## 7) 陽性子 加速治療機 設置 : 430(05-43-22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1월 31일,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)

- 우리나라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으므로 암치료기술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임
-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양성자 가속치료기(Proton Therapy)를 설치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암 치료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사업개요
  - 양성자가속기·전달장치 및 치료장비 등 장비(360억원)와 부속건물 1,800평(120억원)등 건립 추진
  - 추진기간 : 2001 - 2004
  - 소요예산 : 480억원('02 : 100억원, '03 : 296억원, '04 : 84억원)
- 사전 준비
  - 국립암센터에 양성자치료기 도입팀 구성(2000. 10)
  -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(한국보건산업진흥원, 2000.12 - 2001. 5)
  - 미국의 하바드대학병원·Loma Linda병원 방문조사(2001. 2)
  - 양성자치료센터건립추진단 구성 운영(2001. 10 - )
  - 양성자치료 심포지움 개최(국립암센터, 2001.11)
- 예산안 협의 및 '02 예산 확보
  - 총사업비 예산처와 협의(480억원)
  - 2002년 예산에 100억원 반영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4년 말까지 건축공사 및 장비설치 완료
  - 사업제안요구서(RFP) 작성 : 2001. 12 - 2002. 2
  - 입찰 및 계약체결 : 2002. 3 - 6
  - 건축설계·시공, 장비설계·도입·설치 : 2002. 7 - 2004. 7
  - 검사 및 시험가동 : 2004. 8 - 2004. 12
- 2004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운영체계 구축
  - 2002년 상반기 중 「양성자치료센터」 직제 설치
  - 2004년까지 「양성자치료센터」 운영지침, 양성자치료 수가기준 등 마련
-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환자진료 개시

## 8) 콜레라 등 後進國病 防止對策推進 : 536(05-43-23)

## 가. 指示內容(2001년 9월 26일, 제37회 국무회의시)

- 최근 콜레라를 비롯하여 홍역, 말라리아 등 후진국 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. 보건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후진국병이 재발치 않도록 대처 바람

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전염병관리별(61종) 기본관리사업 지침 제정
  - 주요 전염병관리 세부관리지침 제정 및 확산방지 대책 수립과 전염병관리 등 장기계획 수립
- 주요 전염병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보조감시체계 구축과 보건요원의 현장 대처 능력 향상을 통한 전염병관리의 전문화 추진
  - 민간 병·의원 질병정보 모니터망 19,430개소, 콜레라 보조감시관 78개소 및 의료기관 253개 지정·운영
- 전염병관리체계 강화
  -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실시(5.1-10.20)
    - 금년 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조치로 유행을 조기에 종식(8월-10월)
  - 홍역퇴치 5개년 계획 수립·시행
    -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접종확인 사업 및 초등학교 2학년-고등학교 1학년 연령층에 대한 홍역 일제예방접종 실시(1월-7월, 97.7%)
  -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제도 정착(6월-9월)
    -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콜레라 등 水因性전염병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협조하에 대대적인 교육·홍보활동 실시
  - 대국민 홍보활동
    - 집단 발병가능 전염병의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여 예방 홍보 및 발생시 즉각 대처
    - 각종 질병별 홍보물 제작·배포(수인성 전염병예방 요령 등)

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민간의료기관의 전염병 신고 체계 확립
  - 의료기관과 보건소간 전염병 정보망 단계적 구축
  - 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강화
- 일선 보건소 등의 현장 대처 능력 향상
  - 전염병담당 전문요원 육성(260명)하여 방역관리·초기 역학조사 등 담당체계 확립
  - 시·군·구 일선에 대한 시·도의 전염병 조사 지원능력 향상.
- 이질, 장티푸스,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관리 비상근무 실시 등
  -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등에 대한 집중보균검사
- 주요 질병별 태스크포스 구성운영
  - 말라리아, 설사 등 주요 질병별 관리 대책반(조사·관리·연구 등) 구성·운영

## 9) 基礎生活保障制度 施行 點檢 : 542(05-43-24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11월 27일, 제51회국무회의시)

- 날이 추워지는 연말에 홀로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지부 장관은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람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인상

	'99년	'00년	'01년	'02년
- 생계급여 대상자	: 54만명	→ 149만명	→ 151만명	→ 155만명
- 1인당 급여수준	: 98천원	→ 141천원	→ 182천원	→ 204천원
- 기초생활보장예산	: 1.85조원	→ 2.33조원	→ 3.24조원	→ 3.38조원

- 보호의 사각지대 적극 해소

- 선정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특례기준(特例基準) 적용·보호(29천명)
- 부양기피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가 우선 보호(8천명)
- 주민등록말소자, 노숙자 등은 '기초생활보장번호제'를 도입하여 특별 보호(9월말 현재, 651명 보호 조치)

- 부정수급 방지 등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

- 국세·토지·국민연금·실업급여 등 소득·재산 전산조회체계 구축
  - 시·군·구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득·재산 수시 조회 실시(350만건)
- 수시조회가 어려운 금융자산 전국 일제조사 실시(107만건)
  - 적용결과, 15천가구 자격상실, 2천가구 보장비용 징수

-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강화

-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: 63천명('00) → 81천명('01)
- 자활성공사례 : 6천명
- 공동체 창업지원 등을 위한 자활후견기관 확대 : 70개('00) → 200개('01)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근로소득공제 전면 시행 준비

- 현재, 학생·장애인 등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(10~15%)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 추진
  - 전국 3만6천 가구(전체 수급자의 5%)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적정 공제방식 및 공제율 도출 예정(2002년)

- 소득인정액 제도 도입준비 철저

- 2003년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서 소득단일기준(소득인정액)으로 변경 예정(법정 사항)

-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보호 추진
  - 기존 수급자 일부 탈락 및 급여감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'소득 인정액제도 추진단'을 구성하여 사전준비 철저
- 부정수급자 방지 철저
    - 금융자산조회 연간 1회 이상 정기 조사 : 향후, 금융실명제법상 본인 동의 요건 완화 추진
    - 고용보험(임금소득), 공무원·군인·사학 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전산망 연계 확대 추진('02 상반기)
    - 근로능력자에 대한 분기별 소득재산 변동상태 조사 강화
  -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
    -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확대 : 14천명('01) → 30천명('02)
    -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점포지원사업 확대 : 8개소('01) → 20개소('02)
    - 자활근로사업·재활프로그램 확대 및 음식물·폐자원 활용, 집수리·간병도우미 등 저소득층 자활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  - 「찾아가는 복지 행정」 구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확충
    - 사회복지공무원 1,700명 확충 : 5,500명('01) → 7,200명('02)
    -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진작
    -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, 6급이상 승진기회 부여
    - 보건복지부, 시도 및 시군구에 자활전담조직(自活專擔組織) 설치

共通 1) 訪日 後續措置 徹底 : 157(09-70-12)

가. 指示內容(1998년 10월 12일, 제47회 국무회의시)

- 앞으로 각부 장관은 금번 방일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
- 방일성과의 실효성은 양국간에 문서로 합의한 43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
- 한·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상호 정보·의견 교환 실시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제1차('94. 4), 제3차('95.10), 제4차('96.10) 한·일 신경제협력기구협약에서 동 문제를 의제로 상호 의견 교환
- '97.4.18 일본 후생성에서 한·일 차관회의시 조속한 시일내 협정체결 실무회의 개시에 합의
  - '98.8 양국간 사전 정보교환 및 교섭회의 개최를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국민연금제도 설명자료 송부
- '98.10 대통령 방일시 양국간 정보교환 추진에 합의
  - '98.10.19 표제협정추진관련 사전 정보교환 추진을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측에 다시 협조 요청
- '99.1.9 국민연금법개정('98.12.31) 관련 주요 개정내용 등에 관한 설명 자료 송부
- 2000.1.29 「한·일조약국장회의」시 표제협정의 필요성과 실무회의 개최 적극 검토 요청
- 2000.5. WHO 총회에서 한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일본의 후생성장관간에 표제협정에 대해 논의
  - 일본측은 실무교섭회의 개최를 늦추자는 입장 전달
  - 2000.9월 한일정상간 사회보장분야에 대한 협력추진 합의
  - 2000.10.31~11.1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제1차 설명회 개최(일본 후생성)
- 2001.5 WHO에서 보건복지부차관과 일본후생성장관 면담
  - 2001년 하반기중 제2차 정보교환 담당자 회의 개최 제의
- 2001.8.31 보건복지부장관과 일본후생성장관 면담
  - 한·일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조속한 추진에 합의
- 2001.10.15 한·일 정상회담시 양국은 협정 체결교섭의 조속한 개시를 희망
  - 2001.12.20~12.21 한·일 사회보장협정 제1차 예비회담 개최(한국 외교통상부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2년중 일본에서 예비교섭회담 개최 예정

## 共通 2) 빈틈없는 水害對策의 推進 : 264(08-70-25)

### 가. 指示內容(1999년 8월 3일, 제29회 국무회의시)

-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진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큰비가 오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도록 대비해 주기 바람.
- 특히, 지난 2년간의 수해를 거울삼아 충분하고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람.
  - ▲ 추가지시
    - 철저한 수해대책의 수립(1999년 8월 10일, 제30회 국무회의 보고서)
    - 추석대책 만전(1999년 9월 7일, 제34회 국무회의 보고서)
    -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(1999년 12월 28일, 제53회 국무회의 보고서)
    - 해빙기 대형 사고와 수해예방(2000년 3월 21일, 제12회 국무회의 보고서)
    - 철저한 재해 예방(2000년 8월 1일, 제32회 국무회의시)
    -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(2001년 7월 16일, 제29회 국무회의시)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의연금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국고 등의 지원 범위 확대
  - 의연금 부담부분 등 주택과손·유실, 침수주택수리비, 세입자보조비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제도개선
    - 「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」을 행정자치부에 개정 요구('99.12)
    - 행정자치부에서 「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」 개정(2000.7.1 시행)
- 특별위로금 지원기준 통일
  - 특별위로금의 지원이 매년 달랐으나 지원기준을 통일하여 일정하게 지원
    - 의연금관리·운용규정 개정('99.12)
- 재해구호법 개정
  - 재해구호법을 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
    - 관계부처협의 : 2000.10.13
    - 입법예고 : 2000.10.27
    - 국무회의 : 2000.12.05
    - 국회 본회의 : 2001.11.22
    - 공포 : 2001.12.19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이재민들의 불만 제거
- 재해구호법의 취지에 따라 재해구호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

### 共通 3) 對國民 課題弘報 : 282(08-70-29)

#### 가. 指示內容(1999년 9월 21일, 제37회 국무회의시)

- 내년도 예산은 100대 국정과제와 8.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이며, 각 부처는 이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림
- 올바른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홍보가 매우 중요함

#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2000년도 보건복지예산안 설명
  - 사업단위별 관련자료에 의한 기자단 설명회 개최
  - 각 실·국별 정례 브리핑을 통한 예산안 설명
- 국정과제 브리핑 실시
  - 보건복지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정례 브리핑제도 도입
    - 각 실·국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, 기초생활보장등 보건복지의 주요정책방향 및 추진실적을 385회에 걸쳐 브리핑 실시
  - 각종 홍보물 제작·배포를 통한 대 국민홍보
    -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금연대책, 암 관리, 음식문화개선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건복지의 주요정책관련 홍보자료(책자, 리플렛, 포스터, CD-ROM 등)에 의한 국민의 이해 제고
- 방송·광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·홍보 실시
  - TV광고
    - 국민건강보험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가입안내, 의약분업 실시 및 국민연금을 수혜자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
  - 신문광고
    - 국민건강관련 「건강보험이 훨씬 건강해집니다」, 「건강보험료체납자의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」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 홍보로 국민의 이해 제고
  - 방송출연
    - KBS-TV, 라디오 등 78회의 방송출연을 통한 적극적인 대 국민 계도·홍보
  - 각종 언론인터뷰
    - 각종 일간신문 및 의약전문지 등 언론인터뷰를 통한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31회에 걸쳐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
  - 인터넷을 이용한 보도·홍보자료 제공
    - 50여개 언론사 및 의약전문지 등에 483회의 보도·홍보자료 등 제공

#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보건복지의 주요현안, 정책방향 등 관련 보도자료의 적극적인 개발 및 자료제공
-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등에 대해 사전 기획을 통한 홍보의 효율성 제고
- 적기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계도·홍보
- 국정과제에 대한 정례브리핑 실시로 보건복지정책의 이해도를 높임
-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강화

## 共通 4) 中産層과 庶民生活 安定에 主力 : 298(03-70-31)

### 가. 指示內容 (1999년 9월 7일, 제34회 국무회의시)

- 정부는 내년에 중산층의 안정과 서민생활을 돌보는 데 주력해야 함
- 관련법이 마련되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므로 차질없이 조기집행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야 함
  - ▲ 추가지시
    - 소득분배 개선대책 강구(2000년 1월 4일, 제1회 국무회의)
      -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, 분배문제에 관심이 큼.
    - 3대 과업 및 4대 행사의 차질없는 추진(2001년 11월 12일, 제48회 국무회의)
      - 민생안정에 더 노력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강화
  - 경로연금 지급확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(치매병원 18개소, 노인요양 96개소)
  - 장애인 복지수당 지급 (월45,000원)
  - 농어촌 보육아동 무상교육실시 (15만명)
- 사회보험의 내실화
  - '98. 10부터 전국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 통일(소득 및 재산에만 보험료 부과)
  - 의료보험 관리운영조직 통합
  - '99.4. 1 국민연금 확대실시
  - 기금운용의시스템의 운영
- 국민의료기반 확충 등
  -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대상확대 (29만명)
  - 암퇴치 연구사업 추진 (186과제 완료) 및 홍보사업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의약분업,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국민불편이 야기되었고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 및 내용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찾아가는 복지를 차근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보완

共通 5) 公共部門 勞使紛糾에 徹底 對備 : 397(03-70-48)

가. 指示內容(2000년 10월 23일, 제43회 국무회의시)

-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분규가 예상되므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.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임.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되 불법폭력은 절대 용납하여서는 안됨. 원칙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람.

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노사협력을 위한 직장 분위기 쇄신운동 추진
  - 구조조정관련 노사협력 증진
  - 구조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할 것임을 노조측에 이해·설득
- 퇴직금제도 개선
  - 노사합의에 의해 금년부터 퇴직금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(2001.5.8)
- 특별퇴직 등 실시로 인원 감축
  - 희망자를 대상으로 특별퇴직, 조기퇴직 등 실시(1,086명)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원감축
  - 12,357명(2000.7.1) → 11,413명(2001.1.1)
  - 11,413명(2001.1.1) → 10,454명(2002.1.1)
- ※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원감축
  - 1,193명(2000.7.1)→1,158명(2001.1.1)
  - 1,158명(2002.1.1)

다. 向後 推進計劃

- 공단 경영진단 결과에 대한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
  - 경영진단결과 경영혁신위원회 보고 : 2002. 1월 하순
  - 공단경영발전계획안 수립 및 추진 : 2002. 2월

## 共通 6) 人事請託 根絶 : 422(08-70-51)

### 가. 指示内容(2001년 2월 6일, 제6회 국무회의시)

-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후 인사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음. 인사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, 학연, 친소 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됨. 아직도 인사청탁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일임.
- 전 국무위원들이 인사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됨.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는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임. 청탁이 근절된 공정한 인사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해주기 바람.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内容

-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인력의 채용
  - 2001년 제1회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실시
    - 필기시험 실시 : 4. 17
    - 보건직공무원 28명(7급 10명, 9급 18명) 제한공개경쟁 채용 : '01. 5. 19
  - 2001년 제2회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실시
    - 필기시험 실시 : 01. 12. 23
- 동일 직위 장기(2년-3년)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도 운영
  - 4·5급공무원 전보시 2년이상 근무자 15명 전보 : '01. 3.19
  - 2년이상 근무 6급이하공무원 전보 7회 실시(총 92명)
- 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 도입
  - 5급 행정직, 보건직 승진심사시 다면평가 실시(01. 7. 19, 01. 10. 17)
-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·활용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채용, 전보, 승진시에 있어서 인사청탁을 배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
  -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한 인력의 채용
  - 동일직위, 장기(2년-3년)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제도 운영
  - 5급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도 도입
  -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수집·활용

## 共通 7) 女性の 職場生活を 위한 與件 造成 : 521(05-70-57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4월18일, 여성부 업무보고서)

- 젊은 직장 여성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육아문제일 것임.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함
- 여성도 사회의 주체로써 국가·사회·가정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영유아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(안) 마련을 위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학계 및 관련단체의 각 대표와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보육발전위원회와 보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발전기획단을 설치·운영하였음.
  - 보육발전위원회 제3, 4차회의 실시
    - 일시 및 장소 : 2001.5.10(제3차), 7.25(제4차), 보건복지부
    - 참석인원 : 29명(제3차:17명, 제4차:12명)
  - 보육발전기획단 제5, 6, 7차 전체회의 실시
    - 일시 및 장소 : 2001.4.6(제5차), 5.3(제6차), 6.19(제7차), 한국보건사회연구원
    - 참석인원 : 73명
  - 인터넷공청회 실시
    - 기간 : 2001.5.7-5.26
    - 홈페이지주소 : <http://childcare.kihasa.re.kr>
    - 접속건수 : 58,228건
  - 일반공청회 실시(2회)
    - 일시 및 장소 : 2001.5.30-5.31, 8.8, 각 14:00-18:00, 한국보건사회연구원
    - 참석인원 : 약 950여명(발표자:16명, 토론자:17명, 보육관계자 : 900여명)
- 보육발전위원회 및 기획단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고,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육비전 및 세부과제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담은 『보육사업 중·장기 종합발전계획』 확정(2001.12.13)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보육사업 중·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계획임

## 共通 8) 2002年 월드컵大會 準備 徹底 : 525(06-70-58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5월 29일, 제21회 국무회의)

- 월드컵은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보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관광, 체육시설, 문화행사 등 우리가 갖고있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회임
- 각 부처는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각 부처 스스로 월드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

### 나. 지금까지 措置內容

- 응급의료서비스체계 구축
  -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
  - 전국 18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, 지역내 중추 응급의료 제공
- 전염병 감시체계 및 예방 강화
  - EDI 전염병 감시 및 보고체계 구축
    - 국립보건원과 시·군·구 보건소와의 전자보고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
  - 전염병 감시 및 관리를 역학 조사관 17명 배치
  - 미국 CDC 및 일본 전염병연구소와 긴밀한 공조 체계 유지
- 「생물테러 비상 대책반」 구성·운영(2001. 10월)
  - 생물테러에 대한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 등 종합적인 관리
  - 생물테러 대비 종합 훈련
    - 국가정보원, 국방부, 경찰청 등 부처별 대응조치 및 역할분담 점검(2001. 11. 30)
- 식품접객업소의 환경개선
  - 두루마리 화장지, 불결한 물수건, 끝이 날카로운 가위등 외국인 혐오비품 등을 시·도 및 음식점중앙회 등에 개선 지시(2001. 4월)
  - 외국어 메뉴판 비치, 시설 개·보수 자금 저리융자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시·도에 지시(2001. 6월)
  - 음식문화·식당환경개선 실태 점검 실시(2001. 11월)
    - 국무조정실, 보건복지부, 시도,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월드컵 개최도시 및接客업소 대상으로 실시
- 고유 전통음식의 홍보
  - 시·도별 대표 고유 전통음식 발굴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각 시·도에 시달(2001. 6월)
- 식품 등 종사자 친절·위생교육실시
  - 도시락, 김밥 등 제조업소,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12만명 교육실시(2001. 6. ~ 8.)
  - 2002년도 식품등 종사자 특별 위생교육 명령(2001. 12. 26)
    - 교육기간 및 인원 : 2002. 1 ~ 5월, 제조업체 등 영업자, 조리사, 영양사등 82만명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2002. 1 ~ 5. 식품접객업소, 공중위생 종사자 특별위생교육 실시
- 2002. 2 ~ 4. 음식문화 및 식당환경개선 이행실태 점검  
(월드컵정부점검단, 소비자단체등 합동)
- 2002. 3. ~ 5. 도시락제조업소 및 경기장, 관광지등 주변 대형음식점 위생감시실시
- 2002. 6. 제3회 서울국제요리축제 개최 지원

## 共通 9) 電子政府事業의 차질없는 推進 : 531(07-70-58)

### 가. 指示內容(2001년 8월 14일, 제33회 국무회의시)

- 정부의 전자문서 처리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함
- 전 부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내년중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람.  
아울러 국민에게도 잘 알려 국민의 관심과 지원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주기 바람

### 나. 지금까지 推進內容

-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추진
  -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관련 실무추진반 구성(2001. 7.16)
    - 한국전산원, 4대보험공단(심사평가원포함) 실무자 상주근무
  - 프로젝트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사업추진기획단 회의 (2001. 9. 18)
    - 환경분석 현황 및 목표모델 설계 등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·보고
  - 환경 및 현황분석(2001. 9 ~ 10월)
    - 현행 비즈니스 모델·프로세스 분석
    - 정보시스템 현황분석
    - 관련 법·제도 및 표준화 현황분석
  - 제3차 사업추진기획단 회의 및 중간보고회 실시 (2001. 11. 13)
  - 정보연계시스템 ISP 사업 최종결과물 검사완료(2001. 12. 27)
- 복지부·노동부간 협의하여 본사업 설치기관 및 비용분담방안 결정(2001.12.31)
  - 본사업 추진체계는 ISP 추진체계 근간 유지
  - 조직 및 업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치기관 선정 : 국민연금관리공단

### 다. 向後 推進計劃
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단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노력 지속
  -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확인
- 향후 4대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 및 4대 사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

